

현실에 적합한 안전관리 구축과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제도 개선으로 안전 한국건설에 다함께 참여합니다.

김용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안전은 그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안전관리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보다 강력한 사회규제 강화로 안전한 현장,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채, 경제 성장에 따라 재해가 다양하고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재해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1993년도에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산재보험 가입업체를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등 제도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안전관리 대안이 미흡함을 보이면서 2003년에는 산업재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관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안전관리 체제를 안전관리 대상에 따라 새롭게 구축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재해감소가 더욱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현주소에 대해 교수님께서 평소 느꼈던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산업안전관리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들은 철저한 자격제도에 입각하여 선발된 전문 기술자입니다. 그러나 법이 사회발전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전하기 보다 행정위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규제완화라는 미명 등으로 기존 제도의 틀을 크게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안전에 관한 제도를 사회적 규제로서 신중하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규제 강화가 있어야만 더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사회가 선진 안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산업의 발달에 따른 국가의 발전에는 모든 국민과 사회지도층이 그 주축이 되듯이 산업안전의 발전도 근로자와 사업

주가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안전을 실천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리라 봅니다. 특히 사업장의 안전전문가인 안전관리자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 사업장은 재해로부터 극복하는데 수월할 것이며, 산재없는 사업체로 변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법적 채용 규모를 규제완화 전보다 더욱 확대하고 안전교육도 내실있는 교육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안전관리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이 자율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 정책은 지속적이고 보다 향상된 제도로 변화하여야 하며, 오히려 제도변화를 통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러한 정책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율안전관리란 선진국인 미국의 최신 제도 중에서 일부를 본딴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법적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엄한 규제가 뒷받침하고 있고, 보험 및 벌금의 부과로 자율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등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는 다른 국가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사회구성원이 다르며, 국민성과 관련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대행제도는 미국 등지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더욱 우리 현실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내실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안전이라는 명목 아래, 특히 안전관리비를 자율적으로 하여야 한다든지 교육을 알아서 하라는 등의 무책임하고 방임된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방임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안전관리 기반이 확충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재해를 방

치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자들의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었으면 이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에게 일정 부분 산재기금을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실에 적합한 안전관리 구축이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제도가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너무 괴리가 있고 또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책의 지속성이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실종되고 있는 것과 큰 사고뒤 그제서야 제도개선이다 하며 야단법석을 떨고 하는 과거의 수순을 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동안 땅에 떨어진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다시 세울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안전인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사업장의 산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일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종덕 기자)